민주 '신천지 사태' 놓고 갈등 실타래 더욱 꼬여

김민석 비공개 의총서 사과…친청계 '공개사과' 요구
"말 한마디로 끝낼 문제냐" vs "당 통합·민생 매진"
'당 내분' 우려 목소리 커져…계파별 온도차는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참하자 최 수석 최고위원의 명패를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신천지 사태'의 후폭풍으로 계파 간 갈등의 실타래가 더욱 꼬이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가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지도부 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작심한 듯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거론하며 "김 대표가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원래 비밀연합이 없었으니 무슨 증거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가 비공개 의총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문제인가"라며 "피해자인 당원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롱과 모욕을 견뎌온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가 비공개 의총에서의 사과 한 번으로 아물겠느냐"며 김 대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사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김 대표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지 않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지 않으면 '신천지 안개'로 당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당원에 대한 사과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친청계의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례와 달리 이날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김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친청계를 제외한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은 당내 갈등의 확산을 경계하며 사실상 김 대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병도 최고위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입장 차가 있었던 현안에 대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더 크고 단단한 민주당을 위해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관련 조사를 맡았던 박선원 최고위원도 신천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도 계파를 막론하고 내분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 대표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뚜렷하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김 대표가 당을 염려하는 마음과 본인의 죄송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며 "그 진정성이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의 사과에 대해 "당을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의원들의 평가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친청계는 사과만으로 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정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당법 제52조 2항까지 거론하며 법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진수 기자

신정훈, 오늘 '발전공기업 통합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서…공공운수노조 주관
"전력 공공성 확대·정의로운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발전 공기업 5사 통합을 앞두고 전력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4일 신 의원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신 의원과 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발전산업 분할 체제의 중복 투자와 운영 비효율을 짚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와 고용 안정, 탈석탄·재생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신 의원은 앞서 발전 5사 통합과 기존 직원의 고용·근속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 공사 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혁신당, '주52시간제 제외'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서왕진 "기업 지원하되 선 분명히 긋겠다"

조국혁신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비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문금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재선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3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임명된 문 의원은 농어민 권익 증진과 농어업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농정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이행 점검 ▲분과위원회 중심 정책 패키지 추진 ▲정책 경로 간 소통·연결 기능 강화 ▲당 내 농정 영향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농어민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문 의원은 "다시 한번 전국농어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믿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당과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